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반대하며 민주, 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종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왼쪽〉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鄭총리 인준 됐지만 … 또 다시 등돌린 정치권

재보선·국감 맞물려 대치 장기화 국면
與 개혁 드라이브 가속·野 대여투쟁 강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인준을 끝으로 당·정·청 체제를 재구축하고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10·28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감사가 내달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은 10월 내내 계속되고 나아가 11~12월 예산심의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돌격 앞으로**=이 대통령은 29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국무총리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회복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 문제 등 각종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내각'이 공식 출범하면 정 총리 발탁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통합, 화합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권 2기의 새 화두로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행정구역 개편 등을 아우르는 정치개혁 과제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도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진통이 있었지만 동의안이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임 총리가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민생을 살피는 등 국정 현안을 푸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의 보조에 맞춰 정 총리 내각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며 이명박 정부 2기 체제를 강하게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대여(對與)투쟁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세종시 등 정국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을 휘발성 높은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한나라당 주도의 정 후보자 인준안 처리 직후 일제히 비난성명을 내고 혹독한 후속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비리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만도 못한 도덕성, 철학과 소신으론 총리에 임명된다고 한들 '식물총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야당은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 후보자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여당으로서는 원안 추진은 추진대로, 원안 수정은 수정대로 각각 부담이 있다. 원안 추진은 그동안의 말과는 다른 방향이고 원안 수정은 충청권 민심이 짐이 된다.

민주당과 선진당이 원안 처리에 강력 나서는 것도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 에쿠스 방탄차 탄다

현대차 국내 첫 개발
G20 정상회의때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국산 방탄차를 탄다.

현대차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용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열고 자체 기술로 제작한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 3대를 전달했다.

현대차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정상 대부분이 자국산 방탄차를 이용한다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형 방탄차를 개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자동차 업체 중 방탄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벤츠, BMW, 캐딜락 등 소수에 불과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필요한 방탄차를 모두 수입해 썼다.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의 성능은 국제보호등급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방탄차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탑승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대차가 청와대에 기증한 에쿠스 방탄차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수행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가행사에서 요인 경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DJ 옛 일산자택 세금체납 압류

소유주 조풍언씨 세금 안내

고(故) 김대중 대통령(DJ)이 한때 살았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주택이 현 소유주인 재미사업가 조풍언(69) 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국세청 고양세무서는 조씨가 수차례 독촉에도 세금 수백만원을 내지 않자 지난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이 집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조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지난해 7월10일 301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확보하려고 이 집을 가압류 등기했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부지 220㎡인 이 집은 김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1995년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동교동에서 이사한 곳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후 이 집에 살면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1997년 대통령 당선의 꿈을 이뤘다.

1999년 8월 김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조씨가 이 집을 6억원에 사들였으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조씨는 6월 주가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수원 장안'에 발목 잡힌 민주

재보선 최대 격전지… 이찬열-장 상 공천 놓고 골머리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 장안 공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 장안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보선 분위기를 띠우려던 당초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당초, 수원 장안은 '손학규 카드' 불발 이후 당내 흐름은 손 전 대표가 공개 추천한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낙점과 맞물려 장 상 최고위원 쪽으로 공천의 무게추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구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찬열 위원장이 장 최고위원 전략공천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이 위원장을 공개 추천한 손학규 전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의 방향 선회에 불쾌한 심사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장 상 최고위원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애를 태우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도부는 내부 교통정리를 쉽사리 하지 못한 채 장 최고위원의 '입'만 쳐다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민주당 안팎에선 "장 최고위원 출마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장 상 카드' 불발시에는 다시 이찬열 위원장으로 공천이'유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손 전 대표의 전폭적 지원 의사에도 불구, 한나라당 후보인 박 전 의원에 비해 지명도가 낮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여기에 김종률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뒤늦게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면서 스케줄상 후보 선정은 추석 이후에나 이뤄지게 됐다.

현재 공천 대상자로는 지역 출신의 정범구 전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안산 상록을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추석 전 후보 확정을 목표로 경선절차에 착수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록 '거물들의 귀환'이라는 콘셉트가 다소 훼손됐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로도 현 정권 심판론 입증에 충분히 승산이 있으며 추석을 계기로 민심이 확인되면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과학기술인 정년 65세 연장법 발의

한나라 이군현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8일 우수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대폭 감축됐다"면서 "정년 감축이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은 만큼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